

광주·전남 상생 걸림돌 '혁신도시 발전 기금' 갈등 풀리나

이용섭 광주시장·강인규 나주시장 비공개 회동 해법 모색 SRF·나주버스 정치 등도 실무협의체 가동 현안 풀기로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광주시장과 나주시장이 최근 비공개 만남을 갖고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자리에서 '가연성 고흥 폐기물 연료'(SRF·Solid Refuse Fuel)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반입 문제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광주시와 나주시 간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번 강인규 나주시장 만남을 시작으로 최근 균열 양상을 보여온 일부 광주·전남 상생 현안 해결을 위해 본인이 해당 자치단체장을 직접 만나 협상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광주시와 나주시에서 따르면 이 시장과 강 시장은 지난 24일 오후 광주에서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이날 두 단체장은 1시간 30여분간 광·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등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한전공대 유치 과정 등에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과도한 경쟁 탓에 양 지역에 이득보다는 손해가 많았다는 비판에 따라 두 단체장은 이날 전격적인 만남을 갖고 갈등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고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의 핵심은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와 나주시 갈등의 상징인 혁신도시 공

동발전기금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오는 8월 출범을 목표로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지만 재단 출연금과 운영비 부담 안을 놓고 전남도(나주시)와 광주시의 이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출연금과 운영비를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광주시는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에서 총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06년 협약에 따라 즉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세금보다 훨씬 많아 당장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어렵다는 태도로 맞서면서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지난달 21일 열린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협의회에서는 이용섭 시장이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은 강인규 시장을 작성 비판하고 강 시장이 반박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기도 했다.

두 단체장은 또 열병합발전소 문제, 나주 시내버스 광주권 정치 확대 문제 등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시장과 강 시장은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권 쟁점과 센터·재단 설립에 대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그동안 공동기금발전 기금 조성

시기를 오는 2023년으로 미루자고 주장하면서 갈등의 골을 키워왔지만, 이 시장이 이날 '정치적으로 고민하고 풀어보자'는 제안을 했고, 이를 강 시장이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 시장은 그동안 고수해 온 기금 조성 시기를 2023년으로 고집하지 않고 실무진을 꾸려 양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단체장은 또 이날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 양 지역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시는 SRF 생산을 통해 매립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고, 나주시는 값싼 SRF를 연료로 나주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이었지만 나주시 주민 등의 반대로 광주지역 SRF의 나주 반입이 중단됐다.

이 시장과 강 시장은 갈등 현안에 대해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공동발전기금 조성 업무 등 현안을 전달할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와 나주시는 조만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과 나주시 부시장을 대표로 하는 실무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강 시장 회동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상생의 걸림돌로 꼽혔던 광주·군공항 이전과 관련, 이전 예정 지역 단체장을 직접 만나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는 등 광주·전남 상생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의장대 시열하는 한-벨기에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필리프 벨기에 국왕, 김정숙 여사, 마틸다 벨기에 왕비가 26일 청와대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시열하고 있다. 벨기에 국왕 방한은 1992년 보두앵 전 국왕 이후 27년 만이다. /연합뉴스

청와대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 전담판사 결정 존중"

한국당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

청와대는 26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검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그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

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 들어선 좌파독재가 빚은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같은 혐의에 대해 지난 정권의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에게는 가차 없는 구속수사가 진행됐었다"라며 "이는 사법부 장악 완료단계에 들어선 좌파독재의 엄중한 위세를 보여주는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31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기준 부단체장 추가·주민조례발안 자율성 강화... 국회제출 앞뒤

특례시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을 앞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능률성 향상,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됐다.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지자체 능률성 향상을 위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의 기준은 기존 논의와 같이 '인구 100만명'으로 정해졌다. 그간 인구가 100만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도시를 위주로 특례시 기준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실질적 자치권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사무 배분의 원칙을 명확히 해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막는다.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도 부단체장 1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 지자체는 2명을 더 둘 수 있다. 사·도지사가 가졌던 사·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사·도의회의장에게 넘어간다.

중앙에 대한 지방의 자율권을 뜻하는 '단체 자치'를 넘어 '주민 자치'를 강화하는 요소도 포함해 주민참여제도를 실질적

으로 보장한다. 주민의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대표적이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힌다.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 의제를 정하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강화된 자율성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장치도 마련했다. 지방회의의 의정활동이나 조차·재무 등 지자체의 주요 정보는 정보공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의 지금은 재량에 맡겨뒀으나 앞으로는 의무로 바꾼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제고돼 국가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홍남기 "미세먼지 대응 예산 한계...조단위 추경 검토"

"경기대응 추경도 함께 반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질의에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기존 예산으로는 한

계가 있어서 추경을 검토 중이다"며 "(예산 규모는) 아직 검토 중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조(兆) 단위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미세먼지가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앞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데 이어 입장을 한층 명확히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가 이날 국회에서 기존예산으로의 미세먼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상되는 사업비 규모, 법적 근거까지 거론한 점에 비춰보면 정부가 조만간 추경 예산 편성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추경을 공식화할 경우 경제 상황 대응 정책도 반영하지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앞서 미세먼지 추경 검토와 관련해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것과 함께 검토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

청양일초 쭈꾸미

**불황에도 버는 사람은 벌고, 되는 집은 된다.
불황없는 확실한 매출, 청양일초 쭈꾸미!!**

식당 업주님들 요즘 참 많이 힘드시죠?
점심, 저녁, 손님으로 꽉 차는 청양일초 쭈꾸미는 행복합니다.
체인점 개설이 망설여지면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직접 보고, 설명을 들으면 성공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청양일초 쭈꾸미는 지역 내에서 가장 매출이 좋은 식당을 추구하며 가맹점주님들의 행복과 함께 합니다.

**신규창업
업종전환
모두가능**

검색창에 **청양일초쭈꾸미**

**청양일초 쭈꾸미의
독창적 프랜차이즈 시스템**

- 주방장이 필요없는 시스템이라 인건비 절감
 - 저렴한 가격과 월빙메뉴의 경쟁력
- 메뉴가 단순하여 빠르게 손님 대처가 가능
- 직영 물류시스템 및 성공노하우 책임 전수
 - 계절을 타지 않는 아이템
 - 점심, 저녁 모두 할 수 있음

체인점을 가족같은 마음으로 (주)청해

창업문의 1661-1636